주간건설 Review

574호 2019.3.22(금)



(사)한국건설경영협회
KOREA FEDERATION OF CONSTRUCTION CONTRACTORS
홈페이지 : http://www.kfcc.or.kr, 연 락 처 : 02-771-7936
주 소 : (121-916) 서울 마포구 공덕동 467 롯데캐슬프레지던트 101-2103

주간건설 Review

CONTENTS

▣ 업계 동향

- HDC현대산업개발 김대철 사장, 주택협회 13대 회장 선출
- 포스코건설, '업계 최초' 금융기관과 협력사 대출 지원
- 롯데건설, 중장비 무선인식 안전관리시스템 개발
- 대우건설, 평택 소사벌 푸르지오 입주민에 도시락 서비스
- SK건설 '행복나누기 자선레이스'
- 대림산업, 임원·협력업체 대상으로 안전체험 교육

▣ 건설경제 일반동향

- 건설업계, 건설경기 위축에 신사업 진출 활발

▣ 건설 제도정책 동향

- 서울시,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개선대책 마련
-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발표
-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기관 확대방안 실효성 논란

<업계 동향>

◈ HDC현대산업개발 김대철 사장, 주택협회 13대 회장 선출



김대철 회장

○ 3월19일 한국주택협회는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제27회 정기총회'를 열어 김대철 HDC현대산업개발 사장을 제13대 회장으로 선출하였음

○ 김대철 회장은 취임사에서 "국내 주택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책인 한국주택협회 회장직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면서 "정부의 주거안정 정책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규제개선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취임소감을 밝혔음

○ 한편, 김대철 회장은 지난해 3월부터 12대 한국주택협회장을 맡아왔으며 이번 총회에서 연임하게 되었음

◈ 포스코건설, '업계 최초' 금융기관과 협력사 대출 지원



지난해 9월 체결한 '포스코건설 협력업체 금융지원 업무협약식'

○ 3월20일 포스코건설은 업계 최초로 SGI서울보증, 신한은행 등 금융기관들과 함께 자사 협력사들에게 보증서 담보부 대출을 지원하는 '더불어 상생대출' 프로그램을 개시한다고 밝혔음

○ 앞서 포스코건설은 작년 9월 동반성장위원회, SGI서울보증, 신한은행간 '포스코건설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사업'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음

○ 포스코건설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 협력사들도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협력사의 자금 유동성이 확보돼 공사수행 능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음

○ 포스코건설과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사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출을 신청하면, SGI서울보증의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 받아 신한은행으로부터 계약금액의

40%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협력사들은 포스코건설로부터 지급받는 공사 기성금에서 분할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게 됨

◈ 롯데건설, 중장비 무선인식 안전관리시스템 개발



중장비 안전관리 시스템을 적용한 굴삭기

○ 3월20일 롯데건설은 산업, 건설, 재난현장 등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작업자를 보호하는 '중장비 무선인식 안전관리 시스템' 신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음

○ 이 기술은 RFID(무선인식) 칩이 내장된 태그와 리더기를 중장비와 안전모에 설치해 작업자가 중장비에 안전거리보다 가깝게 접근하면 디스플레이 화면에 적색 점멸경보를 발령하는 동시에 중장비 작동을 자동으로 감속하고 정지하도록 하는 것이 특징

○ 롯데건설은 사람의 실수로 시스템 일부가 고장나거나 장비가 불안전 상태가 됐을 경우에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2중(경고), 3중(제어)의 장치 기능을 확보하는 풀프루프(Fool Proof) 안전장치시스템이라고 설명하였음

○ 롯데건설은 영신디엔씨, KR산업과 공동으로 연구해 이번 신기술을 개발했으며 현재 경기 용인 성복동 2차 공동주택사업 현장 등에 적용하고 있음

◈ 대우건설, 평택 소사벌 푸르지오 입주민에 도시락 서비스



입주가 진행 중인 평택 소사벌 푸르지오
입주민들에게 도시락을 제공하는 대우건설

○ 3월19일 대우건설은 최근 입주를 시작한 '평택 소사벌 푸르지오'에서 '도시락 제공'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음

○ 대우건설의 입주민 지원 프로그램 '푸르지오 라이프 프리미엄'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혜택으로, 오는 4월29일까지 사전에 푸르지오 모바일 상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사 희망일을 신청하면 이삿날 입주지원센터에서 도시락을 받을 수 있음

○ 대우건설은 바쁜 이삿날, 근처 식당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어서 끼니를 거르기 쉬운 입주민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한다는 생각으로 계획한 프로그램으로 입주

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 SK건설 '행복나누기 자선레이스'

○ 3월17일 SK건설은 서울국제마라톤대회에서 저소득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행복나누기 자선레이스 행사를 실시하였음

○ 이 행사는 SK건설 마라톤 동호회 회원과 임직원들이 기부를 약속한 임직원 명단을 등에 붙이고 42.195㎞ 풀코스를 완주하는 형식으로, SK건설 임직원들은 사내 인트라넷에서 1구좌당 5,000원씩, 1인 최대 20구좌 10만원까지 기부에 참여할 수 있음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행복나누기 자선레이스'에 참가한 SK건설 마라톤 동호회 회원들

○ 이번 대회에는 SK건설 마라톤 동호회 회원과 임직원 16명이 참가했고 SK건설 임직원 400여명이 후원해 총 700만여원의 기부금을 모았으며, 기부금 전액은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이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행복한 홈스쿨'을 통해 저소득가정 청소년의 교육·문화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

○ 2006년 처음 시작된 이 레이스는 올해로 14년째다. 해마다 두 차례씩 국내 마라톤대회를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누적 기부금은 총 3억원에 달하며 지금까지 저소득·다문화가정 생계비와 교복·교육 지원 사업, 숲 조성 사업 등에 사용되었음

◈ 대림산업, 임원·협력업체 대상으로 안전체험 교육

○ 3월17일 대림산업은 3월 한달간 안전체험학교에서 자사 임원들과 협력업체 임직원 302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음

○ 올해 1월 문을 연 안전체험학교에선 대림그룹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운영에 돌입했으며, 앞으로 안전·보건관리자를 비롯해 현장 시공 관리자, 본사 직원으로 교육대상을 확대할 예정으로 올해 교육 대상자는 총 2500명임



완강기 착용법 및 하강 실습 교육을 받고 있는 대림산업 임원

○ 대림산업은 2023년까지 전 임직원의 안전체험학교 수료를 마무리하고 비상시 대응능력을 키우는 심화교육도 실시하고, 안전체험학교를 일반인(학생 포함)에게도 개방할 계획임

○ 안전체험학교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대림교육연구원 부지 안에서 연면적 1173.5㎡,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되어 교육생들은 총 19개의 교육 및 체험 시설에서 다양한 가설물과 장비 등을 체험할 수 있음

◈ 건설업계, 건설경기 위축에 신사업 진출 활발

○ 건설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건설사들이 위기극복을 위해 신사업 발굴 및 진출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

○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여전한 가운데 건설사들이 고육지책으로 신사업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지만,

<주요내용>

❒ 현황

-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신사업을 정관의 사업 목적에 담거나 유휴자금으로 비(非)건설 분야에 투자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건설사들의 신사업 추진 현황>

건설사	주요내용
GS건설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단계에서 정보 통신 기술(ICT)을 접목해 지능화한 농업 시스템인 스마트팜사업 추진
계룡건설	제로에너지 관련 설계·시공·유지사업 추진
동부건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WIK-용신환경개발 4개사를 인수한 에코프라임PE 사모펀드에 간접 투자해 건설폐기물 사업 진출
태영건설	국내 수처리시장 최다 실적 보유업체인 자회사 TSK코퍼레이션을 통해 산업용 수처리 업체인 휴비스워터와 지난해 11월 합병계약을 맺고 기존 수처리사업은 물론 폐기물에너지·자원순환사업에 진출
서희건설	남북 경제협력에 앞서 선제적으로 필요한 비무장지대의 지뢰 제거 사업을 선점하기 위해 지뢰 제거 장비 연구 및 용역사업 진출 추진
대우산업개발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 입찰에 참여(국내외에서 13개 베이커리 매장 운영을 하고 있는 기존사업 확대의 일환)
우미건설	경기도 이천과 용인에 첨단물류센터 건설 프로젝트 투자와 함께 부동산 분야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스타트업에도 지속적인 투자 추진

- 건설사들의 신사업 진출은 건설경기 하강으로 건설사 인력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휴 인력의 활용이나 건설산업 자체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배경인 것으로 보임

- 한편 위환위기로 극심한 건설경기 침체를 경험했던 90년대말에도 건설사들은 유동성 확보와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원에서 고속도로 휴게소나 리조트 사업 등 신사업 진출을 활발하게 전개한 경험이 있음

❒ 향후 과제

- 최근 건설업계의 신사업 진출 노력은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한 시도지만, 건설업 일감 부족과 산업에 대한 비관적 전망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측면이 강해 보임
- 그 동안에도 다수의 건설사들이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신사업 진출을 추진해왔지만 뚜렷하게 주목받을 만한 신사업 발굴 사례를 찾기는 쉽지 않음
- 이는 신사업 진출에 따른 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은 물론 신사업 인프라 구축에 수반하는 비용문제, 그리고 실패할 경우 투자금 회수 문제 등 각종 변수로 인해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창출이 쉽지 않기 때문이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개선대책 마련

○ 3월21일 서울시는 건설현장의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해 '서울시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힘

<주요내용>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

- 2019년부터 서울시 건설공사 2억~100억 미만의 서울시 발주 종합공사일 경우 '공종분리 검증위원회'를 의무화하고 적정성 검토를 통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시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

❒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 시행**

- 근로자별로 적정임금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며, 시스템은 2018년 서울시가 최초 개발해 현재 시범운영 중이며 2019년 서울시 발주 건설현장에 의무 적용할 계획
-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법정제수당을 자동으로 계산해 각종 수당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될 예정

❒ **'대금e바로시스템' 전면 개선**

- 대금지급,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는 '대금e바로시스템'을 '19년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 후 '20년까지 전면 재구축하여 개선 운영할 예정

❒ **'하도급 심사 표준검토서' 마련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 의무화**

- 발주기관의 하도급 계약에 대한 적정성 심사 시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심사를 위한 '하도급 심사 표준검토서'를 마련하고, 하도급 계약 통보 시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함

❒ **'전자적 하도급 관리' 실시**

- '대금e바로 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체불 등 불공정 하도급 실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전자적 하도급 관리를 실시
- 대금e바로 시스템의 대금지급 관련 정보 모니터링을 통해 지연지급 등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여, 시정 및 행정조치를 강화해나갈 예정

❒ **현장 중심 집중점검 실시**

- 근로자 임금 체불, 장비·자재대금 체불과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며, 점검결과 중대·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마련할 방침
- 점검의 전문성 확보와 효과성 제고를 위해 서울시 직원 외에도 변호사, 노무사, 기술사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함

❒ **불공정 하도급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학술연구 용역 추진**

- '1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시의 불공정 하도급 개선대책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종합적인 진단.평가를 실시하여 서울시 하도급 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향후 서울시의 불공정 하도급에 대한 개선방향 설정

❒ **'하도급 개선협의회' 정례화**

- 건설공사 이해관계자(건설공사 관련협회, 학회, 건설업체 등)가 참여하는 '하도급 개선협의회'의 정례화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하도급 개선 시책의 공감대 조성

❒ **건설공사 참여자 및 관련 공무원 설문조사 등 실시**

- 건설공사 참여자 및 관련 공무원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상시 의견수렴을 통한 시책의 추진결과에 대해 정확히 진단하고 개선방안 도출

❒ **'모범 건설공사장' 운영**

-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장 15곳을 '모범 건설공사장'으로 2019년 말까지 운영
-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사용, 대금 적기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개선 시책(10개)등을 공사장 특성에 맞게 적용해 이들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는지 진단하고, 고질적인 문제들을 도출해 해결방안을 찾을 예정

◈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발표

○ 3월19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확정·발표함

○ 이는 최근 공공기관의 작업장에서 산재사고가 반복되면서 노동자 안전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에 따른 것

○ 금번 대책과 관련하여 건설업계는 안전사고를 일으키지 않거나 우수시공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은 없으며, 빠듯한 공사기간과 부족한 공사비 같은 근본적인 환경은 개선하지 않고 처벌과 입찰 때 불이익을 강화하는 내용만 담겨 있어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함

<주요내용>

❒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유발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강화**(산안법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20.1)

- 도급사업(운전, 정비·보수 등)에서 입찰참가 제한 대상을 사망자 2명 이상에서 사망자 1명 이상으로 확대(건설공사는 2명 유지)
- 입찰제한 기간도 현행 6개월~1년6개월에서 최장 2년으로 확대

❒ **하도급 참여제한**(건산법 시행령 개정, '19.7)

- 산업재해가 다수 발생한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 산업재해 사망자 연간 2명 이상, 산업재해율·사망만인율이 업종 평균 이상 등
- 하도급 참여제한 업체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게재하여 발주자 및 원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 **안전관리 평가 강화**(계약예규 개정사항, '19.상)

- 공공계약 입찰시 ① 안전관리 평가대상 확대(현재 종심제만 실시하고 있는 '안전관리 평가'를 적격심사에도 항목 신설), ② 고난이도 공사의 시공계획 평가시 안전관리 역량 포함

❒ **현장관리 인력 평가**

- 건설공사의 현장관리 인력 책임자급을 정규직원으로 배치토록 입찰평가항목에 반영
-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 지침 개정사항('19.6)

❒ **점검기관 선정**(건진법 시행령 개정, '19.7)

- 건설공사의 안전점검기관을 시공사가 아닌 발주청이 직접 선정하여 안전점검의 독립성 및 실효성 제고

❒ **벌점부과 대상 확대**(건진법 시행령 개정, '19.7)

- 발주청이 부실공사에 대한 벌점 부과 대상을 모든 공사로 확대

❒ **직접 시공 확대**(건산법 시행령 개정, '19.7)

- 주요 시설물의 핵심공종 직접시공*을 유도하고, 직접시공을 해야 하는 공사의 범위 확대**
  * 1종 시설물 등에 핵심공종의 직접시공을 조건으로 계약
    - (現) 국토부 산하기관 적용 → (改) 모든 공공기관 확대 적용('20~)
  ** (현행) 50억 미만 → ('19) 70억 미만 → ('20) 100억 미만

❒ **시공팀 명단 제출**(계약조건에 포함, '19.4~)

- 공공 발주공사에 대해 고용된 시공팀장, 근로자 명단을 제출토록 하여 제도권 밖 불법 시공팀 퇴출유도
  * (現) 국토부 산하기관 적용(300억 이상) → (改) 모든 공공기관 확대 적용('20~)

❒ **원청의 보험료율에 하청재해실적 반영**(보험료징수법 개정, '19.하)

-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산정 시 하청 재해 및 보험급여 지급 실적을 원청의 보험료율에 반영하는 대상 확대
  * 같은 업종이라도 사업장별 산재발생 정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할인·할증하는 제도

현행	적용대상 확대
건설업에 대해 적용	①산업안전보건법('20.1월 시행)에서 정하는 **도급 제한 위반시** ②파견법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에게 **재해 발생**시 ③**하청 산업재해에 원청의 책임**이 있는 경우

❒ **건설업의 안전관리자 제도 개선**

구분	현행	개선
대규모 (800억원 이상)	2명 이상 (공사 초반과 후반에는 1명 이상)	① 안전관리자 자격 강화 ② 공사 전기간에 2명 이상 (1,500억원 이상) * 산안법 시행령 개정, '20.1
중규모 (120억원 이상)	1명 이상	대상 확대('20.1) (120억원 이상 → 50억원 이상)
소규모 (50억원 이하)	3억원 이상은 재해예방기술지도 의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없음)	기술지도 대상(3억원 → 1억원) 및 횟수(월1회 → 2회) 확대('19.4)

❒ **건설업의 안전관리비 제도 개선**

- (편성대상 확대) 안전관리비를 편성해야 하는 대상 확대*(안전관리비 고시 개정, '19.7)
  * (現)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 → (改)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 (지급항목 확대) 첨단기술을 활용한 건설현장 안전관리장비 구입 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19.7)

❒ **발주기관의 책임과 역할 강화**

- 공공기관의 경영 구조를 수익위주에서 안전·생명 우선으로 전환
- 공공기관이 매년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산재 위험이 높은 공공기관을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 매년 기관별 산재 감축목표를 설정토록 함
- 또한, 안전관리 중점기관에 안전업무 전담 조직 설치,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 안전 분야 적정인력 부족 기관에 대한 인력 확충 등을 할 계획

◈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기관 확대방안 실효성 논란

○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마련한 '2019년 민자사업 추진방향'(3.13 발표) 내용 중 현재 KDI PIMAC(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이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기관 확대방안'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음

○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민자투자사업 제안서 검토기관 확대방안'으로, "공공투자관

리센터장 또는 기재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도 제안사업 검토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 중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과 '총 사업비가 20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의무적으로 KDI PIMAC의 검토를 받도록 단서를 명시하고 있음

○ 이 같은 방안은 KDI PIMAC 이외에 다른 전문기관(국토연구원, 교통연구원 등)이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미만인 총 사업비 2000억원 미만 사업'에서만 제안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서, 현재 적격성 검토 절차 중인 26개 사업 가운데 사업비가 2000억원 미만인 사업이 2~3건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실효성이 떨어지고 KDI PIMAC의 독점 구조 해소가 쉽지 않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

○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정부가 다른 전문기관의 민자 제안서 검토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업규모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함